

수 신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경제부 기자
발 신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 목 [보도자료] 19대 대통령선거 각 후보들의 연금정책 성적표 공개
날 짜 2017.5.2.(총 19쪽)

[보 도 자 료]

19대 대통령선거 각 후보들의 연금정책 성적표 공개

- 심상정 1위(92.5점), 문재인 2위(85점). 나머지 후보들은 낙재점(안철수 47.5점, 유승민 23.8점, 홍준표 11.2점) -
- 차기 대통령, 노인 빈곤 해소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개혁과 사회적 합의 중요 -

1. 5월 2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과 사회공공연구원은 19대 대통령 선거 각 후보의 연금정책 공약을 평가한 성적표를 공개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제도, 국민연금 기금 등 3분야의 16개 항목에 대한 전체 평가 결과, 심상정 후보가(정의당) 92.5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문재인 후보가(더불어민주당) 85.0점으로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나머지 후보들은 낙재점을 받았다. 안철수(국민의당) 47.5점, 유승민(바른정당) 23.8점이었으며, 특히 홍준표(자유한국당)는 채점의 의미가 없을 정도로 낮은 11.2점에 불과했다.

2. 모든 후보가 기초연금 30만원 인상을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박근혜 정부가 만든 기초연금의 독소조항인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 폐지와 물가연동을 다시 소득연동으로 바꾸는 것을 공약에 담은 것은 문재인, 심상정 후보밖에 없다. 안철수 후보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폐지만 약속했다. 특히 안철수, 유승민 후보는 소득하위 50% 이하에게만 지급하는 방안이다.

3. 국민연금 제도분야에서도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및 소득상한선 상향, 사각지대 해소(보험료 지원, 크레딧 확대) 등에서 문재인, 심상정 후보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았다.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은 유일하게 문재인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심상정 후보보다도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국민연금 제도분야에서 유승민 후보가(48.6점) 안철수 후보(34.3점)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홍준표 후보는 이 분야에서는 아무런 공약도 제시하지 않았다.

4. 국민연금 기금분야에서도 기금의 민주적 운용, 의결권 행사 강화 등에서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나란히 높은 점수(A+)를 받았다. 특히 문재인, 심상정 후보는 다른 후보들과는 달리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투자 확대를 좋은 점수를 얻었다. 유승민 후보가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어떤 공약도 제시하지 않은 반면, 홍준표 후보는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기 위해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와 같이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주주권행사위원회로 변경하고 법적 기구화하는 방안을 약속했다.

5. 구창우 연금행동 사무국장은 “문재인, 심상정 후보의 공약이 내실 있게 준비된데 반해, 나머지 후보들은 종합적이거나, 구체적이지 못하다”라고 지적했다. “한국사회가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20년에는 노인인구 1천만 명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어느 때보다도 공적연금제도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6.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특히 “신임 대통령은 2018년 국민연금 4차 재정 추계와 1차 기초연금액 적절성 평가를 시행하게 된다.”고 언급하며 이를 계기로 “노인빈곤 해소와 노후소득 적정보장을 위한 제도개혁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붙임> 19대 대통령선거 연금정책 공약 비교평가. 끝.

19대 대통령선거 연금정책 공약 비교평가

2017. 5. 2.

< 요약 >

-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은 적폐 청산과 한국사회의 변화와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할 막중한 시대적 책임감을 부여받고 있음.
- 연금개혁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회적 과제임.
 - 이미 한국사회는 고령사회로 진입했고, 2020년에는 노인인구가 1천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한 사회적 준비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임. 노인 인구의 절반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고, 청년세대는 별다른 노후준비를 할 여력이 없음. 즉 노인빈곤 해소뿐 아니라 고령화와 함께 더욱 심각해질 후세대의 노후준비라는 이중적 과제를 안고 있는 것임.
 - 특히 2017~2018년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가 진행되고, 기초연금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기초연금액 적절성 평가 역시 2018년에 이뤄지는 등 중요한 제도적 계기를 맞이하고 있음.
 - 또한 국민연금기금이 박근혜-삼성 간 비리게이트에 동원되면서 기금의 국민적 신뢰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임.
- 연금행동과 사회공공연구원은 공동으로 각 후보들의 기초연금, 국민연금제도 및 기금에 대한 공약 분석을 통해 후보들이 노인빈곤 해소 및 노후소득 보장을 책임질 수 있는지를 평가했음.
- **심상정 1위, 문재인 2위, 나머지 후보들은 낙제점.**
 - 전체 평가 결과, 심상정(정의당) 후보가 92.5점으로 가장 높은 평점을 받았으며, 문재인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85.0점으로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았음. 반면, 나머지 후보들은 50점도 넘지 못하는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 안철수(국민의당) 47.5점, 유승민(바른정당) 23.8점이었으며, 특히 홍준표(자유한국당)는 채점의 의미가 없을 정도로 낮은 11.2점에 불과했음.

구분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기초연금	80	25	50	5	95
국민연금제도	82.9	0	34.3	48.6	91.4
국민연금기금	88	16.0	64.0	0	92.0
총점 (100점 만점 환산기준)	85.0	11.2	47.5	23.8	92.5

* 자세한 평가 결과는 본문 참고

- 각 분야별 점수에서도 심상정, 문재인 후보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유승민 후보의 경우 국민연금 제도분야에서는 오히려 안철수 후보(34.3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음(48.6점).

19대 대통령선거 연금정책 공약 비교평가

이재훈(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구창우(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1. 들어가며

1) 19대 대통령선거에서 연금정책의 의미와 중요성

- 2017년 한국사회는 ‘고령사회’로 진입
 - 한국 사회는 올해 전체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14%가 넘는 고령사회에 도달할 예정이다¹⁾. 그리고 2020년에는 노인 인구가 1천만 명을 넘어서게 되고(10,018,519명), 2021년 20%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음.
 - 즉, 이번 19대 당선된 대통령은 한국사회가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초고령사회’를 준비해야 하는 중대한 과정에서 국정운영을 맡게 됨.
- 빈곤에 허덕이는 노인세대, 노후준비가 어려운 청년세대
 - 우리나라의 상대적 노인빈곤율은 2013년 49.6%에서 2014년 48.8%로 다소 감소했으나, 여전히 OECD국가 가운데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음(OECD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 노인 빈곤의 문제는 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부양해야 하는 전 세대의 문제이기도 함. 특히 저임금·불안정 노동의 확대로 인해 별다른 지원과 대책이 없다면 노후준비가 어려운 세대들이 미래에 겪게 될 문제이기도 함.
 - 즉 한국사회는 현 세대의 노인빈곤 문제 뿐 아니라, 향후 고령화와 함께 더욱 심각해질 후세대의 노후준비 문제라는 이중적 과제를 안고 있는 것임.
- 2018년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와 기초연금액 적절성 평가

1) UN은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중이 14%에 도달하면 ‘고령사회’, 20% 이상을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음.

- 국민연금은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하고 있으며(법4조제2항), 2003년, 2008년에 이어 2013년에 이어 2018년 4차 재정계산을 앞두고 있음. 그동안 정부는 재정계산 결과에 따른 ‘국민연금 기금고갈’을 근거로 끊임없이 국민연금 개악을 추진·시도해왔음. 2007년 국민연금 급여삭감을 추진했으며, 지난 3차 재정계산(2013년) 당시에도 2044년 수지적자, 2060년 기금소진으로 재정안정을 위해 수급연령 상향, 보험료 인상 등의 필요성을 강조함.
- 이번 4차 재정계산은 국민연금제도의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임. 기존과 같이 ‘재정안정’만을 위해 국민연금을 축소하는 정책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모든 국민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급여수준의 적절성과 대상범위의 포괄성(사각지대 해소)을 강화하는 것으로 정책기조를 전환하면서 정부의 일방적 개악이 아닌 사회적 논의를 진행할 지는 차기 정부가 풀어야 할 중요한 숙제 중 하나임.
- 또한 2018년은 5년마다 시행기로 한 기초연금 적절성 평가가 처음으로 이뤄지는 해이기도 함(법제9조). 박근혜 체제가 남긴 유산 중 하나인 기초연금의 독소조항을 개선해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을 실질적으로 해소해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고 있음.

- 박근혜-삼성 비리게이트에 동원된 국민연금기금의 신뢰회복
 -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이 정권과 재벌의 추악한 비리게이트에 동원됐음. 특별검사팀은 “국민의 노후자산 관리인인 국민연금이 청와대 등의 외압 탓에 손해를 알면서도 합병에 찬성”했으며 ‘삼성 측은 8천 549억을 이익을 취한 반면, 국민연금은 1천 388억 손해를 봤다’고 수익-손해액을 적시해 수사결과를 발표함.
 -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관련자 처벌 뿐 아니라, 국민연금기금이 정권과 재벌의 외압에서 벗어나 제도와 조응하며 민주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함. 또한 구속된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대신하는 신임 공단 이사장은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이해가 높고, 청렴하며 정권과 자본의 외압에 휘둘리지 않는 인사가 이뤄져야 할 것임. 이러한 적폐청산 과제 역시 차기 정부가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중대한 과제임.

2) 평가 대상 및 내용

(1) 평가 대상 및 방법

- 평가 대상은 19대 대통령 선거후보의 연금 정책 관련 공약으로 함. 현재(4.27) 14명의 대통령 후보가 등록돼 있으나, 전국 평균지지율이 2% 이상인 후보를 대상으로 하여 문재인(더불어민주당), 홍준표(자유한국당), 안철수(국민의당), 유승민(바른정당), 심상정(정의당) 총 5인의 대통령 후보(이하 기호 순)를 중심으로 평가함.
- 각 후보의 연금정책은 후보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공약 및 정책자료, 그리고 공적연금강화 국

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의 '정책질의서'에 답변에 기초하여 분석함. 연금행동의 정책질의를 대해 심상정 후보와 문재인 후보(최신 순) 만 회신이 왔으나(민주당 경선 당시 이재명, 안희정 후보 포함), 나머지 후보들은 질의서에 회신하지 않음.

(2) 평가 기준과 내용

- 평가의 기본적 방향은 ILO의 '사회적보호 최저선에 관한 권고'(202호, 2012)에 따라, 수평적·수직적 차원에서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사회적 보호를 점차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해 제시한 두 가지 전략에 근거해 ① 소득보장의 보편적 적용(적용범위의 포괄성) ② 권리로서의 급여와 빈곤예방(급여수준의 충분성)을 평가의 기본 방향으로 함.
- 특히 이러한 방향 하에서 ILO가 연금개혁의 원칙으로 제시한 ① 소득보장의 보편적 적용, ② 권리로서의 급여와 빈곤예방, ③ 급여와 기여 간 보험수리적 집단적 형평성, ④ 건전한 재원, ⑤ 관리운영의 국가책임과 함께 ⑥ 사회적 논의를 통한 연금개혁을 핵심 내용으로 함.

[표-4] 평가 기준 및 내용

평가기준	내용	
	기초연금	국민연금
①소득보장의 보편적 적용	○ 수급 대상범위 확대	○ 사각지대 해소 - 보험료 지원 및 크레딧 제도 확대 - 적용범위 확대(특수고용노동자, 영세 지역가입자 등)
②권리로서의 급여와 빈곤예방	○ 급여 상황 ○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 폐지 ○ 연동방식 변경(물가→소득)	○ 급여(소득대체율) 상황 ○ 국민연금 소득상한선 개선
③급여와 기여 간 집단적 형평성	-	○ 중장기적 재정목표(급여 및 보험료 계획 등)
④건전한 재원	○ 중앙정부의 전액 국고지원 및 재원조달 계획	○ 기금운영의 민주적 운용 및 가입자 대표성 강화 등 ○ 국민연금기금의 공공투자 여부
⑤관리운영의 국가책임		○ 국가의 급여지급보장 명문화 여부 ○ 기금운용본부 공사와 반대 여부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 등
⑥사회적 논의를 통한 연금개혁	○ 1차 기초연금액 적절성 평가 (2018) 및 개선 방안 논의	○ 4차 재정계산(2017~2018) 및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여부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제도 및 기금 관련 주요한 사회적 혹은 후보 간 첨예한 쟁점 사안인 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보장 여부 ② 기초연금 30만원 상향 대상자 하위 50% vs 하위 70% ③ 국민연금기금운용 신뢰회복 및 공공투자 ④ 국민연금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의제별 집중 분석을 진행하고자 함.

2. 각 후보자별 연금정책 공약

- 후보자들의 정책 공약집에 있는 연금 관련 내용을 그대로 재정리한 것임.

1) 문재인(더불어민주당 후보)

[표-5] 문재인 후보의 주요 연금정책 공약

구분	공약 내용	비고
기초 연금	○ 차등 없는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어르신 70%) - 현재 월 10~20만원 차등지급 → 30만원 균등지급 (*'18년부터 25만원 '21년부터 30만원 인상 시 연평균 4.4조 추가소요)	'18년 예산안 편성반영
국민 연금 (제도)	○ 국민연금·퇴직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강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국민 노후소득대비의 실질적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소득대체율을 올리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확충 추진. - 국민연금 소득대체를 인상을 위한 중장기 방안 추진 - 소득대체를 인상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므로, 정부, 가입자, 공익,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운영하여 인상마련 방안 * 국민연금 소득대체를 상향목표로 사회적 합의추진 ○ 현행 두루누리 지원사업에 건강보험 지원 추가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경력단절 여성 및 저소득층 연금가입 지원 확대, 연금 크레딧(pension credits) 확대	'17년부터 정책검토 후 사회적 합의 추진
국민 연금 (기금)	○ 보육, 장기요양, 치매, 장애재활, 공공의료 등 분야를 중심으로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시설 확충 - 국민연금 공공투자 정책과 연계하여 기존 민간시설 매입 및 장기임대를 중심으로 국공립시설 확충 - 정부가 보육, 임대주택, 요양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공채를 발행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적극 투자 유도. ○ 정부, 가입자대표, 공익대표 등의 국민연금기금운용 거버넌스를 확고히 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 - 유명무실화 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상시화 및 위원회 권한 강화,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법제화 등 추진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깨끗하고 개혁적인 인사로 임명 ○ 사회책임투자원칙에 입각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 -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주주권행사 모범기준(스튜어디스 코드) - 총수일가에 의한 기업불법·편법 지배 및 상속방지, 소액주주들의 이해관계 침해방지, 사외이사 임면 등의 사안에 대해 주주권 적극행사(기업의 통상적 경영권은 주주권행사 대상에서 제외) - 주주권 행사원칙 및 기구절차 법제화, 회의록 등 주주권 행사 정보공개 - 환경 및 소비자 권익보호, 근로자권익 옹호 등 사회적 가치가 기업경영활동에 반영되도록 유도	
기타	○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공적 퇴직연금 도입 -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퇴직연금으로 공적자산운용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중소영세 퇴직연금 기금제도」 도입 - 퇴직연금의 수익성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국가 역할 확대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월 30만원으로 인상(국민연금 A값의 15%). 부가급여를 장애추가비용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현실화(0.42조)	

*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선 공약 자료집 등에서 재정리

2) 홍준표(자유한국당)

- 홍준표 후보는 '서민맞춤형 복지 지도 완성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 30만원까지 인상하겠다는 공약과 의결권 행사 이외 다른 연금정책 관련 공약은 없음.

[표-6] 홍준표 후보의 주요 연금정책 공약

구분	공약 내용	비고
기초연금	○ 65세 이상 노인 : 기초연금 30만원까지 인상 - 22년까지 65세 이상 소득하위 70%(현행과 동일) 어르신 10만원 인상	
국민연금	○ 공정하고 투명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 주식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주주권행사전문위원회로 개편해 법적기구화 - 기업의 합병 건과 같이 중요한 사안은 반드시 주주권행사 전문위원회에서 심의·승인 및 내용공개 의무화	

* 자유한국당 제19대 대선 공약 자료집 등에서 재정리

3) 안철수(국민의당)

[표-7] 안철수 후보의 주요 연금정책 공약

구분	공약 내용	비고
기초연금	○ 기초연금 확대 노년빈곤 개선 - 저소득노인 기초연금 증액(소득하위 50%, 30만원)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폐지 -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통합 노후소득보장 계산제도' 도입 ○ 기초연금 등 국민생활 관련 복지비의 국비지원 확대	기초연금 확대 및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세부실행방안 마련 및 법 개정
국민연금(제도)	○ 국민연금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사각지대 해소 및 내실화 - (직장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인상으로 연금액 상향조정 - 임의 가입자 소득하한 조정 및 기준소득액 상한액 인상 - 출산, 군복무 크레딧 확대, 두루누리제도 적용확대, 유족연금확대, 전업주부(무소득배우자) 연금보험료 배우자 세금 공제	
국민연금(기금)	○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처벌강화 및 손해배상 추진 ○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방안 마련 - 주식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주주권행사위원회로 확대개편 - 주주권행사 지침 사전공시, 행사여부 사후공시로 투명성 확보 ○ 스톱어드십코드 채택 등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한 법·제도 정비	국민연금법, 상법 등 개정
기타	○ 노후준비계좌제도 도입 - 개인별 노후준비 지원을 위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연금자산의 통합가상관리계좌 도입 ○ 장애인연금 확대(기초급여는 기초연금 수준으로 확대, 부가급여는 장애수당으로 통합)	실행모형개발 및 시범사업 실시, 법 개정

* 국민의당 제19대 대선 공약 자료집 등에서 재정리

4) 유승민(바른정당)

[표-8] 유승민 후보의 주요 연금정책 공약

구분	공약 내용	비고
기초연금	○ 소득하위 50%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차등적 인상 - 기존 소득하위 70% 대상 지급은 그대로 유지.	임기 첫 해 강력한 의지와 추진력으로 관련 법
국민연금(제도)	○ 국민연금의 최저연금액을 보장하고 단계적으로 80만원까지 인상(생계급여 < 최저연금액 < 최저임금). 국민연금 상한선 점차 확대해 재원 마련. ○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의 국고지원 ○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 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	제도를 정비할 것이며, '18년도 예산 반영(불필요한 재정지출절감 및 중부담-중복지 합의에 의한 재원마련)
국민연금(기금)	- 해당사항 없음	
기타	○ 장애연금의 수급대상자를 중증장애인 소득하위 80%까지 확대하고 기초급여액도 10%까지 인상.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부가급여도 최대 12만원까지 인상	

* 바른정당 제19대 대선 공약 자료집 등에서 재정리

5) 심상정(정의당)

- 심상정 후보는 “누구나 존엄한 노후 보장”을 모토로, 기초연금 100% 지급,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을 통해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을 보장”하겠다는 비전과 공약을 제시함.

[표-9] 심상정 후보의 주요 연금정책 공약

구분	공약 내용	비고
기초연금	○ 100% 모든 어르신께 월 30만원 기초연금 지급 - 국민연금 가입기간 차별지급 방식 폐지, 국민연금 A값 연계 - 캐나다의 클로백(상위층 세금환수) 제도 도입	
국민연금(제도)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 군대·실업크레딧 확대, 양육크레딧 도입 등 사각지대 해소, 중소기업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 ○ 국민연금 불신해소 위해 국가지급 의무 법에 명시 ○ '두루누리사회보험 2' 신설 : 지역가입자에게도 동일 보험료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2> 월 소득 140만원 미만 소상공인 및 지역가입자 대상(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 4~60%지원)
국민연금(기금)	○ 국민연금기금의 적절한 관리로 재정건전성 강화 ○ 공공임대주택, 장기요양시설 등에 사회 공공투자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임투자 연평균 8조
기타		

* 정의당 제19대 대선 공약 자료집 등에서 재정리

3. 후보자간 공약 비교(1) ○ (적극 동의/공약 있음), △ (취지나 일부 동의/ 일부 공약), × (반대 또는 없음)

구분	현행	연금행동 요구	문제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기초연금 급여	20만 4,010원 (기준연금액 100%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평균소득 대비 최소 15%(약 30만원)로 상향	○ (하위 70%)	○ (하위 70%)	○ (하위 50%)	○ (하위 50%)	○ (전체노인)
	국민연금과 연계 (가입기간 10년 이상부터 기초연금 감액/ 20년 가입은 절반 감액)	국민연금과 연계 폐지	○	×	○	×	○
	물가연동 (기존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평균소득과 연동)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A값)과 연동	○	×	×	×	○
기초연금 대상	자산조사를 통해 소득하위 70%이하에게 지급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지급 (사각지대해소 및 행정비용 감소)	△ (신중검토)	×	×	×	○
국고부담	지방자치단체와 재정분담 (최소 10% ~ 최대 60% 분담)	전액 국고 지급	△ (취지찬성)	×	△	×	○
국민연금 지급보장	없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은 명문화)	법 개정을 통한 명문화	○	×	×	×	○
국민연금 급여	2017년 소득대체율 45.5% (2028년 40%까지 삭감)	2018년 45%에서 급여삭감 중단 사회적 논의 통해 50% 상향	○	×	×	△ (최저보증 연금)	○
	2017년 434만원 (공무원연금 805만원)	소득상향선 상향(현실화) 및 급여상향선 신설	○	×	○	○	○
국민연금 사각지대	특수고용·가사노동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	사업장 가입으로 전환	△ (취지찬성/ 단계적 추진)	×	×	×	○
	저임금 노동자 및 저소득 지역가입자 사각지대 문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확대 (사업장기준 개선, 지역가입자 신규지원, 건강보험 포함 등)	○	×	○	△	○
	출산크레딧, 군복무 크레딧 일부 제한적으로 적용	'육아 크레딧' 으로 확대 청년을 위한 크레딧 신설	○	×	○	△	○

3. 후보자간 공약 비교(2) ○ (적극 동의/공약 있음), △ (취지나 일부 동의/ 일부 공약), × (반대 또는 없음)

구분	현행 또는 일부 주장	연금행동 요구	문제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국민연금 기금 지배구조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의 별도 공사화 설립(일부 주장)	별도 공사화 반대	○	×	×	×	○
	정부의 높은 영향력	가입자 대표성 강화 및 민주적 운영 (정부추천 축소 및 국회추천 신설 등)	△ (취지찬성/ 사회적 합의 통해 추진)	×	×	×	○
		공개적이고 독립적 운영 보장 (정례화, 공개화, 안건발의권 및 자료 요청권 등 권한 부여)	○	×	○	×	○
	의결권만 행사(주주권행사 ×)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개선 (주주권전문위원회로 전환 및 법적기구화)	○	△	○	×	○
국민연금 기금운용	금융부문 재무적 수익 중심의 투자운용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투자확대 (보육, 요양, 병원 등)	○	×	△ (주택분야)	×	○
	'책임투자' 로만 규정, 선택적으로 반영해 위탁운용	'사회책임투자' 법으로 명문화 및 세부적인 범위와 기준을 설정해 적용하고 평가·모니터링체계 마련	△ (취지찬성/ 사회적 합의 통해 추진)	×	×	×	○
공무원 연금	책임준비금 법 규정이 있으나, 실제 미 적립하고 있음.	책임준비금 적립을 통해 연금재정안정	△ (취지찬성/ 사회적 합의 통해 추진)	×	×	×	○
사회적 기구	정치권 주도의 일방적 개혁	노후소득보장과 빈곤해소를 위한 연금개혁 사회적 기구 구성(2018년)	○	×	×	×	○

4. 주요 쟁점별 분석

- 문재인, 심상정 후보의 경우, 공약자료 외 연금행동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포함해 분석함.

1) 모든 후보 기초연금 30만원 공약. 그러나 같지만 다른 약속.

구분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기초연금 독소조항	국민연금 연계 → 폐지	○	×	○	×	○
	물가 연동 → 소득 연동	○	×	×	×	○
기초연금 인상	20만원 → 30만원	○	○	○	○	○
	인상 대상	70%	70%	50%	50%	100%

* 문재인 후보의 경우, 물가연동을 소득연동으로 변경하는 것은 공약에는 없고, 질의서에 찬성한다고 답변한 것에 근거함.

(1) 박근혜의 유산, 기초연금 독소조항은 그대로 방치?

-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음. 그러나 두 가지 독소조항을 지니고 있었음. 첫째,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을 덜 주는 것(최대 10만원). 둘째, 기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과 연동해 인상하던 방식을 물가연동으로 바꾸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질가치를 하락시킨 것임. 아래 표에서 보듯이, 박근혜 정부가 물가연동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2017년 기초연금은 기존 소득연동 방식 때보다 11,600원 덜 받게 됐음. 더욱 큰 문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이는 더욱 커진다는 점이며, 기초연금의 실질 가치는 더욱 하락할 수밖에 없음.

○ 문재인, 심상정 후보만 독소조항 폐지 약속(안철수 후보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만 폐지).

- 이번 대선에서 모든 후보가 기초연금 3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음. 하지만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만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함. 국민연금 가입으로 인해 기초연금 감액을 받는 수급자는 2014년 약 16만 명에서 2016년 약 23만 명으로 점차 확대되어 왔음. 앞으로 국민연금 제도성숙과 더불어 감액대상자는 더욱 많아질 것임.

- 물가연동 문제 역시 문재인, 심상정 후보만 기존 기초노령연금과 같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과 연동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음.

- 즉 제대로 기초연금 3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후보는 문재인, 심상정 후보밖에 없음. 두 후보 간에도 인상시기에서 미세한 차이가 있음. 문재인 후보는 2018년부터 25만원, 2021년부터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느린보 인상인 반면, 심상정 후보는 2018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표-11] 기초연금의 물가연동 방식과 소득연동 방식 비교(금액 차이, 단위 : 원)

구분	현행 물가연동(a)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 연동(b)	차이(a-b)
2014년	200,000원	200,000원	-
2015년	202,600원	204,480원	-1,880원
2016년	204,010원	210,550원	-6,540원
2017년	206,050원	217,650원	-11,600원

* 단독가구 및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 기준.

(2) 기초연금 30만원은 하위 50%에게만?

- 기초연금의 또 다른 쟁점은 각 후보마다 30만원 지급하는 대상범위가 다르다는 것임.

- 현행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70%에게 지급하고 있는데, 안철수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소득하위 50%에게만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힘. 반면, 문재인, 홍준표 후보는 현행 70% 지급대상에게 모두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며, 심상정 후보는 모든 노인에게 30만원 지급하는 방안임.

○ 소득하위 50%(안철수, 유승민) VS 소득하위 70%(문재인, 홍준표) VS 전체 노인(심상정)

- 언뜻 보면, 소득이 낮은 노인에게 30만원 주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고, 오히려 소득상위 30% 부자노인에게도 기초연금을 주는 방안은 재원낭비라고 여겨질 수 있음.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 먼저 소득하위 50% 이하의 노인에게만 30만원 주겠다는 방안(10만원 인상)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소득하위 50~70% 구간에 속한 노인(현행 그대로 20만원 받게 되는 노인)이 기초연금 10만원을 덜 받아도 될 정도로 상대적으로 나은 상황이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함.

- 그러나 실제 전체 노인인구 698만 명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0원인 노인이 약 20%이며, 소득하위 50%미만에 해당되는 노인은 소득인정액이 60만 원 이하인 경우임. 즉 소득하위 50%를 넘는 노인이라고 하더라도, 소득이나 재산 등의 수준이 높은 것은 아니며 이미 충분히 선별적임. 49%와 51%라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소득역진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음.

○ 소득하위 70%(문재인, 홍준표) VS 전체 노인(심상정)

- 기초연금 수급대상을 70%로 할지, 전체 노인(100%)으로 확대할 지는 50%와 70%처럼 민감한 쟁점은 아닐 수 있음. 그러나 법적으로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기초연금을 지급받는 수급자 65.3%에 불과한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2016년 말 기준). 정부가 기초연금의 대상이 되는 소득평가액 기준을 너무 낮게 책정했기 때문에, 실제 지원율을 채우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임.

- 소득 및 재산 등에 대한 소득심사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부담은 가중되고, 억울한 탈락자가 발생하기도 할 뿐 아니라, 민원도 끊이지 않게 발생하고 있음.

-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공약처럼,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하되 클로백(부자노인에 대한 급여환수) 시스

템을 도입하고 국민연금과 함께 관리운영을 일원화하면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고, 억울한 탈락자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면서 보편성과 형평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임.

2) 국민연금 급여상향과 사각지대 해소

(1) 국민연금 급여 상향 : 2007년 연금개혁에 대한 반성적 평가

구분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국민연금 급여상향	국민연금 급여상향	○	×	×	○	○
	소득상향선 상황	○	×	○	○	○
사회적 기구 구성		○	×	×	×	○

- 문재인, 심상정, 유승민 후보가 기초연금 뿐 아니라 낮은 국민연금 급여수준의 문제를 제기하며 상향을 공약으로 제시한 것에 반해, 안철수 후보는 소득상향선 상황만 제시하고 있고, 홍준표 후보는 아무런 공약도 없음.
-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 기준 2017년 현재 45.5%이며, 매년 0.5%씩 자동 삭감돼 2028년엔 40%까지 낮아질 예정임. 제도 초기에는 소득대체율 70%에서 출발했으나, 1999년 60%로 10%p 낮췄고, 다시 2007년에 기존 60%를 2028년 40%까지 낮추는 급격한 급여삭감을 결정한 바 있음.
- 하지만 실제 평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약 20년밖에 되지 못하는 것을 감안하면 실질 소득대체율은 이보다도 낮은 20% 수준에 불과함. 2016년 국민연금 월 평균 연금액은 약 36만원에 불과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의 1인 기준 생계급여 49만 6천원보다도 낮은 수준임.
- 또한 2017년 1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가운데 213만원 미만이 약 59%로(171만원 미만은 47.7%), 국민연금은 대다수 중·저소득층에겐 유일한 ‘노후준비’ 수단임. 빈곤예방을 넘어, 기본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국민연금 급여의 적절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임.

○ 심상정·유승민 명확, 문재인 모호, 안철수 부족, 홍준표 없음.

- 먼저 심상정 후보는 소득대체율 50% 상향을 명확한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반해, 문재인 후보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을 언급하면서도 명확한 입장이나, 목표 소득대체율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중장기 방안 추진이나 사회적 합의 추진 등 다소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 지난 4월 19일 KBS방송토론회 당시, 문재인 후보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가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 당시 국회 특위에서 합의한 사항이므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실제 공약에는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음.
- 보수후보인 유승민 후보조차, “연금을 받아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이것은 연금이 아니”

라며 낮은 국민연금을 올려야 한다고 강조함. 그리고 국민연금이 최저연금액을 보장해 단계적으로 80만원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공약함. 반면, 안철수 후보는 소득상향선 상황만을 언급하고 있으며, 홍준표 후보는 국민연금 공약 자체가 없음.

○ 국민연금에 대한 정책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 그동안 국민연금에 대한 정치권의 인식은 애초 연금제도의 목적과 취지 자체를 망각한 채, 기금고갈, 재정안정만을 강조하며, 정치권 주도의 일방적인 방식으로 개혁을 추진해 왔음.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일방적으로 삭감한 국민연금 급여를 다시 상향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에 대한 반성적 평가로 해석할 수 있으며, 그만큼 정치적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일부에서는 “소득대체율 50%까지 올리려면 보험료를 17%로 올려야 하는데, 대체율 인상만 이야기할 뿐 보험료 인상은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음(윤석명 2017. 4). 그러나 아직까지 국민연금의 재정목표나 재정운영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수리적인 관점으로 보험료 인상 공포를 부추기면서 급여상향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막으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지금 필요한 것은 국민연금이 담보해야 할 기본적인 노후소득 보장수준(적절성)과 사각지대 해소(포괄성)를 목표로 국민연금에 대한 제도적 신뢰를 높이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는 것이며, 이에 따라 중·장기적인 재정전망 하에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단계적인 재원 방안 계획(국고 및 보험료 인상)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추진하는 것임.
- 이런 측면에서 문재인, 심상정 후보가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약속한 것은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중심으로 국민연금의 정책기조를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임.

(2)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 국민연금 사각지대 문제는 국민연금제도가 지닌 가장 중요한 과제이자, 해묵은 숙제임. 현재 10인 미만 저임금사업장에 대해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이나, 출산·군복무 크레딧 등이 추진되고 있긴 하나, 여러 가지 제도적 한계 또한 지니고 있음.
- 먼저 현행 두루누리 사업은 저임금 사업장(사용주, 노동자)에 대한 지원만 이뤄지고 있는데,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영세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오히려 배제되고 있음. 문재인, 심상정, 유승민 후보는 지역가입자에게도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음. 특히 문재인 후보는 국민연금·고용보험뿐 아니라 건강보험료까지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공약에 담았음. 심상정 후보 역시 지역가입자 지원하는 ‘두루누리2’를 신설하고 기존 두루누리 사업과 동일한 보험료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으며, 건강보험료까지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찬성 입장을 밝힘. 반면, 안철수 후보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두루누리제도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공약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고, 전업주부(무소득배우자) 연금보험료 세금공제만을 제시하고 있음.

-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크레딧의 경우, 문재인, 심상정, 안철수 후보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유승민 후보는 현행 6개월인 군복무 크레딧을 12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공약에 담고 있음.
- 특수고용노동자의 직장가입자 전환 문제에 대해 문재인 후보 측은 취지에 찬성하며,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분야부터 단계적 추진”하겠다고 답변했으며, 심상정 후보 역시 전환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음.
- 반면, 홍준표 후보는 이에 대한 아무런 공약도 제시하지 않았음.

3)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신뢰회복 및 공공투자

구분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국민연금기금	신뢰회복 및 투명성 강화	○	△	○	×	○
	공공투자	○	×	△	×	○

(1) 기금운용의 신뢰회복 및 투명성 강화

- 지난 특검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이 불법동원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었음. 정권과 재벌의 외압으로부터 벗어나 국민연금기금이 가입자인 국민의 이익에 복무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임.
- 이를 위해서는 기금운용에서 가입자 대표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데, 문재인, 심상정 후보는 현재 유명무실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법적기구로 전환해 사회책임투자 원칙에 입각해서 주주권행사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함. 안철수 후보 역시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부정한 영향력 행사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손해배상을 추진하고,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주주권행사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공약함.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원칙인 스튜어디스 코드 도입에 대해서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 모두 동의하고 있음. 다만 문재인, 심상정 후보는 가입자 대표의 권한과 책임을 무력화하고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에 비해, 안철수 후보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에 대해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음.
- 한편, 홍준표 의결권 행사 관련한 내용만 일부 포함돼 있을 뿐이며(주주권행사전문위원회 법제화), 유승민 후보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신뢰회복을 위한 아무런 공약도 제시하고 있지 않음.

(2) 국민연금 공공투자 추진

- 현재 560조에 달하는 국민연금기금의 대부분은 채권, 주식 등 금융부문에 투자되고 있음. 일부에서 기금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나 해외 투자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기금수익을 조금 높인다 해서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것이 아님. 오히려 고위험 자산에 투자 확대는 경제위기나 금융위기 시 커다란 손실을 야기할 수 있으며, 만약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제도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은 국민연금에 매우 치명적이 될 수 있음
- 국민연금 재정불안은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 저성장 및 사회적 양극화에 따른 보험료 수입, 지출의 불균형에서 비롯된 문제임. 국민연금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 구조를 바꾸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공공보육, 공공임대, 공공요양, 공공병원 등 공공인프라에 대한 확충은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기반을 늘림으로써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투자방안이라 할 수 있음.
-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와 관련해 문재인 후보는 보육·장기요양·치매·장애재활·공공의료 등 분야를 중심으로 국공립사회서비스 제공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국공채 발행 시 국민연금이 적극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으며, 심상정 후보도 국민연금을 활용하여 공공임대주택 및 장기요양 시설 등 사회 공공투자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함. 안철수 후보는 국민의당이 20대 총선 당시 국민의당 공약으로 국민연금을 활용하여 청년임대주택을 확충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번 대선 공약에서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음.
- 한편 유승민 후보는 국민연금 공공투자와 관련하여 아무런 입장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홍준표 후보는 지난 4월 22일 토론회에서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은 함부로 빼 쓰지 못하도록 연금 도둑놈 징벌법을 만들어 아예 대못을 박아 놓겠다."며 국민연금 공공투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함.

5. 총괄 평가

○ 채점기준

구분	기준	점수
A+	공약에 명확하게 포함돼 있는 경우	0.5
A	공약에는 있으나,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0.4
	공약에는 없으나, 명확히 찬성 입장 밝힌 경우	
B	공약에는 없으나, 취지 동의 및 긍정검토 밝힌 경우	0.3
C	공약에 일부 제한적인 내용만 반영한 경우	0.1
F	공약이나 입장이 없거나, 반대하는 경우	0.0

○ **채점결과** : 심상정 후보(92.5점) 1위, 문재인 후보(85.0점) 2위, 나머지 후보들은 낙제점.

- 전체 평가 결과, 100점 만점 기준 심상정 후보가 92.5점으로 1위, 문재인 후보가 85.0점으로 2위, 안철수 후보가 47.5점으로 3위, 유승민 후보가 23.8점으로 4위, 홍준표 후보는 채점의 의미가 없을 정도로 낮은 8.6점에 불과함.

구분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기초 연금	국민연금 연계 폐지	A ⁺	F	A ⁺	F	A ⁺
	물가 연동 → 소득 연동	A	F	F	F	A ⁺
	20만원 → 30만원 (인상 대상)	A ⁺ (70%)	A ⁺ (70%)	C (50%)	C (50%)	A ⁺ (100%)
	전액 국고지원	B	F	A	F	A
소계(100점 만점 기준)		80	25	50	5	95
국민 연금 (제도)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A	F	F	F	A ⁺
	국민연금 급여 상황	A	F	F	A ⁺	A ⁺
	국민연금 소득상한선 상황	B	F	A ⁺	A ⁺	A
	특수고용노동자 지역가입자 전환	B	F	F	F	A
	저임금·저소득 보험료 지원	A ⁺	F	B	A	A ⁺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A ⁺	F	A	B	A ⁺
소계(100점 만점 기준)		82.9	0	34.3	48.6	91.4
국민 연금 (기금)	기금운용본부의 별도 공사화 반대	A	F	F	F	A
	기금운용의 민주적 운영	A ⁺	F	A ⁺	F	A ⁺
	의결권행사 강화(주주권 확대 등)	A ⁺	A	A ⁺	F	A ⁺
	사회책임투자 강화 및 평가모니터링	B	F	B	F	A
소계(100점 만점 기준)		88	16.0	64.0	0	92.0
총점(8점 만점)		6.8	0.9	3.8	1.9	7.4
100점 만점 환산 기준		85.0	11.2	47.5	23.8	92.5

- 각 분야별(기초연금, 국민연금제도, 국민연금기금) 평점으로 보더라도, 심상정 후보가 모든 분야에서 1위였으며, 문재인 후보는 2위를 차지함.
- 유승민 후보의 경우, 국민연금 제도분야에서는 안철수 후보(34.3점)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점수를 받았음(48.6점).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독소조항 개선에 대한 언급이 없을 뿐 아니라,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어떤 공약도 찾아보기 어려워서 전체적으로 안철수 후보보다 낮은 점수를 기록했음.